

#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2010년 3월 26일

현진권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E-mail: [jkhyun@ajou.ac.kr](mailto:jkhyun@ajou.ac.kr)

## 요약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과 관대한 복지국가'이며, 조세정책에서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세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선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서 대폭 세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형태가 2005년에 획기적인 폐지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이었다.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성은 현재 국민들의 상속세제에 대한 의식수준을 몇 가지 자료를 고찰한 결과, 정책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환경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을 디자인하는데, 상속세 완화는 하나의 좋은 정책안이 될 수 있다.

핵심어: 스웨덴, 상속증여세, 정치경제학

## I. 서론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sup>1)</sup>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부담과 관대한 복지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므로, 형평의 가치관이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조세정책은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각국마다 강조하는 정책목표는 조금씩 차이를 가진다. 스웨덴은 세입정책 측면에서 높은 세부담을 채택하였고, 세출정책에서는 관대한 복지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형평에 대한 국가적 가중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목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도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형평보다는 효율의 가치가 지배적인 반면, 상속 증여세는 효율보다는 형평논리가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세부담 수준이 높다. 즉 전체 GDP의 절반이 세금인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효율보다는 형평에 정책적 가중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세목 중에서도 가장 형평의 가치에 민감한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스웨덴의 일반적 정책기조와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이 전후 경제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반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과는 달리 조세부담율도 GDP 대비 약 20% 수준으로, 정부의 민간개입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은 정부역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조세정책에서도 경제성장보다는 형평성에 가중치를 확실하게 줌으로써, 다른 국가들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세구조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이 각각 90%, 50% 수준으로 현대적 의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세부담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있던 스웨덴이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기존의 조세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조세개혁이 1991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1991년부터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1991년 조세개혁의 커다란 범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도

1)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국가들로는 캐나다가 1972년에 세계 최초로 폐지하였고, 호주는 1977년부터 1984년 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으며,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폐지하였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세계개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된 현상이지만, 세수규모는 별로 크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다. 이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 정책방향에 따라 정치적 지지도가 민감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sup>2)</sup>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정치적 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절대 현실화될 수 없다. 정책이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제도의 이해는 완전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 상속증여세의 폐지정책을 채택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책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같은 정책안이라고 해도 두 국가들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 조세제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2005년에 이루어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을 한 시점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조세정책의 추이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본다. 역사적 고찰과 함께, 이들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배경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스웨덴의 제도를 연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에서도 스웨덴의 정책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조명하고, 시사성을 얻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변천의 역사적 고찰과 이들 세목들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중요성을 살펴본다. 제Ⅲ절에서는 스웨덴의 조세정책 변천과정 속에서 1991년 세계개혁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전반적인 특성을 평가한다. 제Ⅳ절에서는 상속세 폐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배경으로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살펴본 후, 제Ⅴ절에서는 상속세 폐지정책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에 주는 시사성을 살펴본다.

---

2)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노무현 후보가 들고 나온 정책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정책상품이 '상속세 포괄주의'이었으며, 이는 상속세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 II. 스웨덴의 상속 증여세제: 변천과 특징

스웨덴의 상속증여세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이들 세목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결과를 중심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inheritance tax, estate tax를 사용하며, 이들 두가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영어의 두가지 표현 하의 상속세제가 동시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이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없이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먼저 'inheritance tax'는 상속취득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 용어로 사용하면 '취득형 상속세'가 된다. 반면 'estate tax'는 사망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산형 상속세'이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제의 영어표기는 'estate tax'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 내에서만 정의되는 것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 정의에 따르지 않은 국가도 있다.<sup>4)</sup>

### 1.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스웨덴의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요약한 결과가 <표 1>이다. 상속세를 처음도입한 해는 1884년으로,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 형태이었으며, 세율은 현재보다 월등히 낮아서 법적 상속인이 있을 때는 0.5%, 없을 경우에는 0.6%이었다. 또한 증여세제는 1915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33년에는 기존의 취득형 상속세와 함께,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대신에 기존의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대폭 높아졌다. 다음 해인 1934년에 또 다시 유산형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다시 무산된 대신에, 부유세(wealth tax)를 도입하였다. 유산형 상속세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무산되었지만, 다른 형태로 이들 계층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948년에는 마침내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를 도입하였으며, 상속세는

3)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상속세의 영어표현을 'inheritance tax'로 하고 있다.

4) 예를 들면, 영국은 상속세를 inheritance tax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도를 보면 사망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estate tax이므로, 이 정의에 맞지 않다.

취득형 상속세와 유산형 상속세가 공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스웨덴은 상속세제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산형 상속세제는 약 10년간 지속되다가 1959년에 폐지되었으나, 대신에 취득형 상속세 부담이 강화되었다. 결국 상속세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속세 부담은 강화되었으며, 그 형태는 한가지 세목 혹은 두가지 세목으로 형식적 차이만을 가질 뿐이었다.

취득형 상속세제를 통해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속세 정책은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다가 2004년에서야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상속세제는 2004년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지만, 1991년 세제개혁에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법인세, 소비세, 소비세제 등에서 정책목표를 형평성에서 경제성장으로 바꾸는 정책개혁이 있었지만, 상속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스웨덴 세제는 1991년 세제개혁 범주 속에서 지속되다가, 2004년에 비로서 상속세제도 10여년 전 조세개혁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다. 즉 2004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5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가졌다. 상속세제의 개혁이 있기 전해인 2003년의 상속 및 증여세의 세율을 보면, <표 2>와 같다. 과세 대상자별 과세기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세율은 10%, 20%, 30%의 세단계로 구성된 누진세 구조를 하고 있었다.

상속세제를 폐지하였지만,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대신에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적용하였다. 스웨덴의 소득세제는 '이원소득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로서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따라 차등과세 하는 이원소득세제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최고한계세율이 국세 25%와 지방세 30-33%를 포함하면 55-58%인 반면, 자본소득은 지방세는 없고 국세로 단일세율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 증여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오히려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이들 자본소득은 세후 근로소득의 일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되어 실제로는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반면 상속 증여로 인한 자본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상대

5)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적 성격을 가져 중과세되므로, 소비기반과세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5년 이후에는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목표를 둔, 부 친화적인 정책(wealth friendly policy)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상속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 1884년: 취득형 상속세제를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세율은 법적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0.5%, 없을 경우에는 0.6% 이었음.
- 1894년: 상속세제의 세율이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최대 1.5%
- 1915년: 현대적 의미의 증여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1933년: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estate tax)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에 기존의 상속 및 증여세부담을 높였음.
- 1934년: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의회에서 무산되었음. 대신 부유세(wealth tax)가 도입되었음.
- 1941년: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이 있었음
- 1948년: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를 시행하였음.
- 1959년: 유산형 상속세제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증가되었음.
- 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를 폐지하였음.
-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음.

**<표 2> 2003년 과세 대상자별 상속 증여세 세율**

(단위: SEK, %)

과세대상자 1	과세대상자 2	과세대상자 3	세율
300,000 미만	70,000 미만	90,000 미만	10
300,000-600,000	70,000-140,000	90,000-170,000	20
600,000 이상	140,000 이상	170,000 이상	30

주: 과세대상자 1: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과세대상자 2: 과세대상자 1, 3에 속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상속 및 증여  
 과세대상자 3: 비영리법인, 자선단체에 대한 상속 및 증여

**2. 상속세제의 경제적 특성**

스웨덴에서 2004년 상속세제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형평성을 강조하

는 대표적인 세목이었다.<sup>6)</sup> 실제 상속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부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시기별로는 1930년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상속세제가 과세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전체 세수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개인입장에서 부과하는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제가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경제적 행위변화는 매우 크다. 여기에서는 상속세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속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두가지 형태의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1948년에 기존의 취득형 상속세제와 함께 유산형 상속세제를 도입하였다. 상속에 대한 세금이 강화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기 한해 전인 1947년에 증여행위가 갑자기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1947년 증여세수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부표 1 참조). 또한 <표 3>과 같이 스웨덴의 한 지역인 Dalarna에서 발생한 증여행위의 건수와 증여액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한해 전인 1947년에 증여건수 및 증여액에서 전년대비 3배에 가까운 증가가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경제주체들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행위를 변화시키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표 3> 스웨덴 Dalarna 지역의 증여행위 변화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증여건수	48	96	70	185	204	564	234	122
증여액	520	1611	644	3343	3035	11752	3533	117

주: 증여액의 단위는 천 SEK 임.

자료: Ohlsson (2007)

두번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상속세가 사망자의 사망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경제변수들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학 각 분야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사망시간과 같은 비경제적 행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비록 많지 않은 연구결과이지만, 사망시간도 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Kopczuk and Slemrod(2003)는, 미국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상속세부담이 낮은 쪽으로 사망확률이 높아지며, 2000년 기준으로 만분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사망시간을 연장하는 확률이 1.6% 증

6) Ohlsson(2007)은 스웨덴의 상속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에 형평성을 위한 세금이었다고 단정짓는다.



가하게 됨을 보였다. 또한 호주의 연구로, Gans and Leigh(2006)는 1979년에 있었던 상속세 폐지의 실증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5%가 상속세 폐지되기 전주에서 다음 주로 사망시기를 옮겼음을 보였다.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사망시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 실증연구로 사망자료를 통해 분석한 Eliason and Ohlsson(2007)이 있다. 이 연구는 2004년과 2005년에 상속세제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 시기를 전후로 사망패턴을 살펴보았다. 즉 2003/2004년과 2004/2005년 12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며, 비교대상은 이전 4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 12월 31일에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상속세제 개정 과정과 연계해서 살펴본 결과, 상속세 폐지가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날의 사망자 수는 16.3% 감소하나, 이후 14일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12월 31일에는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1월 1일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제가 사망자의 사망시간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작동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측면에서 상속세제가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정책측면에서 상속세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 Ⅲ. 스웨덴 조세정책의 흐름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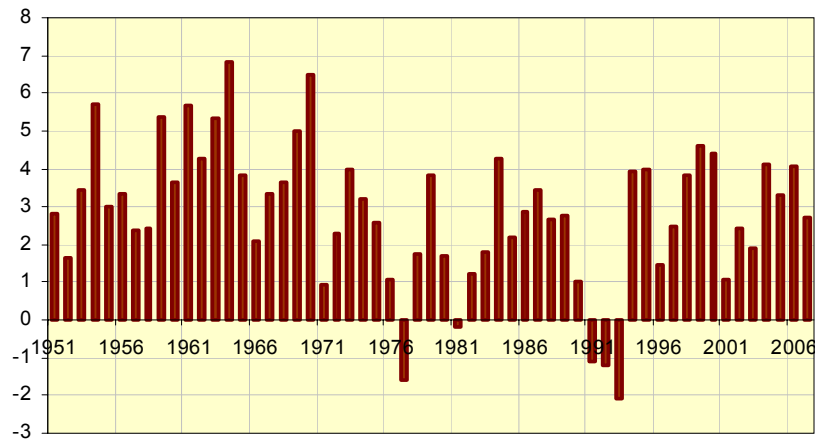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조세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조세정책의 기초변화를 살펴본다.

#### 1. 경제성장의 역사적 흐름

스웨덴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전후에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은 반면,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거쳤다. [그림 1]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준다(구체적

인 수치는 부표 2를 참조). 1950년대부터 연도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성장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비교적 경제 회복적인 수치를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990년대 초반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확연하게 경제성장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경제성장 형태는 세계대전 이후로 양호한 경제성장 수준을 보이다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 속도가 더디면서 심한 편차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보고,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991년 세계개혁은 기존의 형평성 위주의 조세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가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세계개혁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GDP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1951-2007



주: 불변가격은 2000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임.

## 2. 1991년 세계개혁

1991년 세계개혁을 추진하게 동기는 높은 세부담과 정부지출 규모로 특징지어진 재정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79년에 최고한계세율구조를 보면 소득세는 87%, 법인세 52%로서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198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이 2.2%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세제개혁이 1991년에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1991년 세제개혁을 야기한 동기는 경제성장을 위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1991년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즉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2) 자본소득에 대해선 낮은 단일세율을 부과하며, 3)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1)과 2)는 조세경쟁이 민감한 세목 및 소득종류에 대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며, 3)은 소득관련세제에서의 세수결손을 보충하고, 품목별 차별적 세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다. 세가지 정책수단은 모두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공평성이 더 증가하는 정책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1991년 세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1991~1993년간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1994년에서야 3.9%의 성장률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 더디게 나타나, 실업률이 1.7%에서 11.6%로 증가하고 1997년까지 두자리 숫자의 실업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과세기반의 축소로 인해, 세입규모와 조세부담률이 하락함에 따라 지출에 커다란 문제점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조세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지출개혁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은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관대한 공공부문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원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성장지향적 1991년 조세개혁안들은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3. 평가

스웨덴은 195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21%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970년에 2배로 증가하고, 1980년대부터는 50%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경제발전 전에 제대로 이를 수 없었다.<sup>8)</sup> 높은 세금과 관대한 복지체제로 인해 경제발

7) 여기서 설명하는 평가는 주로 Larson(2006)을 참조하였다.

8) 1970년에 개인소비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3위였고, 이는 OECD 평균치보다 39% 높은 수치였으나, 1995년에 14위로 하락하였고, OECD 평균보다 1.4%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전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 지향적인 조세개혁이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1991년에 시행되었다. 즉 저축과 투자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고, 특히 법인세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1991년 세계개혁의 기본기조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 조세정책의 특징으로 먼저 좋은 면을 살펴보면, 1991년 세계개혁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을 대폭 인하한 정책과 대기업에 대해 획기적으로 세부담을 낮춘 것이다. 또한 한국처럼 소기업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관대한 세제지원하는 정책방향과 달리 오히려 세부담이 높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인해 과세기반 이동을 통해 조세경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대기업과 자본소득에 대해 형평성에 반하는 정책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조세경쟁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부과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지출수준을 줄이지 않는 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담이 국제간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동, 저축, 투자행위에 대해 억제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문직종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음에 따라 교육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1993-2000년간에 대학 졸업자들의 해외 이주자가 48% 증가하였다.

조세개혁은 현재 50% 수준의 조세부담률로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개혁은 정부부문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1991년 조세개혁은 스웨덴 역사상 획기적인 개혁방향이지만, 지출구조 개혁 없이는 이러한 방향의 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9)</sup>, 아직까지 '큰 정부'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높은 편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부담은 필연적이거나, 지출구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크지 않으므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관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성장위주의 세계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스웨덴이 높은 세금과 정부지출로 인해 민간경제에 부담을 많이 주지만,

9) Afonso, et al.(2003)에 의하면, 공공부문 효율성을 23개 선진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스웨덴이 투입효율성 측면에서는 23위, 산출물 효율성 측면에서는 12위를 보여주었다.

경제성장률은 기대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세정책 측면에서만 조명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성장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은 많이 있다. 조세정책 이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제자유 보장수준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자유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수준이 높아서,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지표로는 세계 19위를 보이고, Fraser Institute의 Freedom of the World 에서는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자유경제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IV. 상속증여세 폐지의 정치경제학

### 1. 이론모형

일반적인 조세정책의 경제적 분석에서는 후생경제학적 구조 속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의 조세정책이 결정되는 양상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속세 폐지정책을 포함해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성장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방향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론은 현실성이 없어진다.<sup>10)</sup> 즉 상속세 폐지정책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조세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구조에서 설명해 본다.

최적 조세이론 하에서 최적인 조세정책을 유도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한다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공선택적 접근에서는 정부의 목적함수는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아니고, 사적이익(self-interest)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공공선택적 접근을 통한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현실을 해석하는데 설명력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up>11)</sup>

10) Holcombe (2006)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ecause tax policies are designed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our understanding of how tax policy is made cannot be complete without integrating the politics of the process into the economic ideas that provide the foundations(p. 239)".

조세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기존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에서 정치적 지지도를 극대화하는 접근으로 조세정책을 해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Hettich and Winer(1988)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모형의 개략적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지지도를 정책목표로 삼았을 때, 어떠한 조세구조가 나오는 지를 보여준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이 낮을수록 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개인입장  $i$  에서 정부의 선택변수인 조세  $T_i$ 와 정부지출  $G$ 에 의해 편익  $b$ 와 손실  $c$ 가 발생하며, 편익과 손실 간의 차이에 의해 정치적 지지도 수준이 결정된다. 즉

$$b_i (G) - c_i (v_i), \quad i = 1, \dots, N$$

여기서  $v_i = T_i + d_i$  로서 정부가 세금  $T$  을 부과하면 세금 뿐 아니라, 세금으로 야기하는 사중손실  $d$ 를 포함한 전체 부담액이며,  $N$ 은 전체 주민 수를 의미한다. 또한 세금크기는 과세기반  $B$ 와 세율  $t$ 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_i = t_i * B_i,$$

여기서  $B_i = B_i (t_i)$ 이며,  $\partial B_i / \partial t_i < 0$  이며,  $d_i = d(t_i)$ ,  $\partial d_i / \partial t_i > 0$  특성을 가진다.

정부는 주민들의 전체 정치적 지지도를 극대화하려고 하므로, 정부의 정책 목표함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Max. } \sum ( b_i (G) - c_i (v_i) ) \tag{1}$$

여기서 정부예산의 제약조건으로;

$$G - \sum t_i B_i = 0 \tag{2}$$

---

11) Buchanan(1988; p.1)은 재정학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have summarized the theoretical welfare economics of the mid-century decades as "theories of market failure" and the public choice economics of the post-middle decades as counterpart "theories of political failure".

제약조건 (2) 하에서 (1)의 정책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partial c_i / \partial v_i \cdot \partial v_i / \partial t_i) / (B_i (1+e_i)) = \sum \partial b_i / \partial G = \lambda \quad (3)$$

여기서  $e_i = \partial B_i / \partial t_i \cdot t_i / B_i$  로서,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을 의미하며, 식 (3)의 왼쪽식의 분모인  $B_i (1+e_i)$ 는 세율을 통한 한계 세수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지지도를 극대화하려는 정부 조세정책의 필요조건인 식 (3)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1원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의 감소수준이 모든 주민에게 똑 같은 수준의 세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세수증가분 1원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감소수준이 세금을 통한 지출정책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지지도와 같은 수준이 최적인 조세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은 정치적 지지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상속 증여세 폐지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논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정치적 지지도에 민감한 세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세목별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는 일반적으로 세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도 연계성을 가지므로, 스웨덴 국민들의 각 세목별 의식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 2. 실증자료

이상의 정치경제학적 이론구조를 통해, 상속세 폐지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지지에 대한 간접지표로서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인식도를 사용할 수 있다. Hammar, et al.(2006)은 2004년에 스웨덴 국민들 중에서 연령대가 15-85세 사이의 3,000명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하였으며, 1,77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해서 11개 세목에 대해 공통적인 질문은 “다음 세목의 세부담이 증가되어야 하는가 혹은 감소되어야 하는가?”이었으며, 답변은 5개 스케일

내에서 응답 요청하였다. <표 4>는 전체 1,690명의 응답자가 각 세목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대폭 감세 혹은 폐지를 선호하는 비중이 각각 52%, 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반응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사고는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는 감세에 대해 반대하는 좌파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들도 상속증여세 감세 혹은 폐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sup>12)</sup>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로서, 상속세 폐지정책이 한국사람들의 기본의식 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방향이나,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정부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세율인하 혹은 세목폐지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정부의 지지도를 가장 극대화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통해서도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

<표 4>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반응결과

(단위: %)

세목	대폭감액/ 혹은 폐지	소폭감액	현상유지	소폭증액	대폭증액
부동산세	39	32	17	1	0
<b>상속세</b>	<b>52</b>	18	12	3	1
<b>증여세</b>	<b>48</b>	19	14	3	1
사회보장세	14	36	25	2	0
주 소득세	12	40	32	5	0
자동차세	13	39	33	5	1
지방 소득세	8	42	35	5	0
주세	20	35	25	6	6
환경세	19	30	29	10	3
부유세	25	18	24	13	6
법인세	6	15	29	11	2

주: 전체 표본수 1,690개

자료: Hammar, et al. (2006)

12) Hammer, et al.(2006)은 이념적 성향에 대한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통계분석 한 결과,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짐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시사성

### 1. 스웨덴 정책의 결론

상속 및 증여세제는 1991년의 조세개혁과는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다른 세목의 조세개혁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2005년에 이루어졌다. 상속 증여세가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제인 만큼, 1991년 조세개혁 이후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수단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세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선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대폭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추이는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형태가 2005년에 획기적인 폐지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1991년 세제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후 2007년에는 부유세 폐지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1991년 세제개혁, 상속증여세 폐지정책, 부유세 폐지정책은 같은 범주 속의 개혁이 시간대별로 달리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과 부푼한 복지체계에서 변화를 요하지는 않는 듯하다. 부푼한 복지체계과 높은 세부담은 필연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게 하므로, 경제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지체계와 큰 정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정부 세입을 축소할 수 없게 되고, 높은 세부담은 결국 경제성장의 감소라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한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조세정책이 상속 및 증여세의 폐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들 세목들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폐지하더라도 정부재원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경제성장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대폭 하락 혹은 폐지하는 방향을 선호하므로, 정치적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상속 증여세 폐지정책은 전체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대신에 한계적인 개혁이지만, 개혁에 따른 비용이 없는 대신에 미래의 편익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 2. 한국에의 시사성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근간에는 국민들의 이들 세금에 대한 의식수준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볼 때, 이들 세목을 폐지한 것은 정책지지를 극대화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혁방향을 스웨덴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이 상속 증여세에 대해 가지는 의식구조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들이 상속세제에 대해 가지는 의식수준을 살펴본다. 2008년 MBC 라디오에서 2,042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상속세 폐지와 현재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이 각각 약 20%를 차지하였고, 폐지불가이지만, 상속세율은 낮추자는 의견이 전체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53.5%, 부정적인 반응이 36%로 나타났다.<sup>13)</sup> 따라서 상속증여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14)</sup>

한국과 스웨덴 국민들 간에 의식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어렵다. 단지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에 있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사고차이를 <표 5>를 통해 살펴본다.<sup>15)</sup> 상속증여세가 형평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세목이므로, 이들 세목에 대한 직접자료는 없지만, 형평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 국민들의 인식형태는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평균치로 비교해 보면, 한국 6.5인 반면, 스웨덴 6.1로서 한국의 인식

13) 질문은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정부안은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현행 10~50%에서 6~33%로 바꾸는 안이다.

14) 참고로 미국의 경우, 미국민들 중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1%이지만, 전체 국민의 70%가 상속세제를 폐지하는데 찬성하였다(Economist; June 17, 2006).

15) 이 문항에 대해서는 10개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1이 의미하는 바는, "Income should be made more equal."이며, 10은 "We need larger income difference s incentive."을 의미한다.

구조가 소득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정책안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환경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소득불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

척도	한국(2005)	스웨덴(2006)
1: 균등한 소득분배	4.4	6.2
2	4.0	3.0
3	10.3	8.0
4	4.9	8.4
5	7.9	11.2
6	8.1	11.4
7	19.2	17.2
8	19.3	21.4
9	11.7	6.9
10: 유인책으로 소득격차 필요	10.1	6.2
평균치	6.5	6.1
조사 수 (명)	1,199	992

자료: World Value Survey

조세정책이 정치적 구조하에서 개혁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재정학에서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효율성 중심의 접근방법은 현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 Poterba(1998)은 조세정책을 설명하는데 공공선택적 모형이 설명하는 바가 크지만, 전통적인 효율분석의 접근법도 여전히 정책입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sup>16)</sup>

상속 증여세제의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의 효율성과 전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이는 좀더 정교한 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한 조경엽(2008) 연구에서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조경엽(2008)은 한국 상속세 정책의 후생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속세 인하가 경제의 효율

16)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if tax policy is largely about equating the marginal political costs of different taxes, whether economic analysis has any ultimate impact on the tax-writing process. Fortunately for practitioners of "neoclassical tax policy analysis," the answer is yes..."(p. 395)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전통적인 경제분석방법을 통해 정책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고, 정책개선이 줄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면과, 둘째, 효율성 위주의 분석결과는 정책입안 단계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각 제안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무상속 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현행보다 40% 인하할 경우에,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원~1,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이 후생은 307억원~4,837억원이 증가하여, 총 사회후생은 1,685억원~6,683억원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2007년 6월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 1,879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조세정책을 지적한 업체가 전체의 78.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제발전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가들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웨덴 국민들과 같이 상속 증여세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득분배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스웨덴 국민들과 비슷한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세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환경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두면, 상속 증여세 인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정부재원 감소비용이 매우 작지만, 경제주체들에 주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성은 현재 국민들의 상속세제에 대한 의식수준을 볼 때,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환경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성장을 위한 정책조합을 디자인하는데,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는 좋은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안종석, 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조경엽,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2008.
- Afonso, A., L. Schuknecht, and V. Tanzi, "Public sector efficien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242, 2003.
- Buchanan, James, "Market failure and political failure", *Cato Journal*, Vol. 8, No. 1, 1988, pp. 1~13.
- Edwards, Chris and Daniel Mitchell, Global tax revolution, Cato Institute, 2008.
- Eliason, M. and H. Ohlsson, "Living to save taxes", Working Paper 2007-8, Uppsala University, 2007.
- Gans, J.S. and L. Andrew, Did the death of Australian inheritance taxes affect deaths?, 2006.
- Hammar, H. S. Jagers, and K. Nordblom, "What explains attitudes towards tax levels?: A multi-tax comparison", Working Paper, 2006.
- Hettich W. and S. Winer, "Economic and political foundations of tax struc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88, pp. 701~712.
- Holcombe, Randall, Public Sector Economics, Pearson Prentice Hall, 2006.
- Kopczuk, W. and J. Slemrod, Dying to save taxes: evidence from estate-tax returns on the death elastic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2), 2003, pp. 256~265.
- Larson, Sven, "The Swedish tax system: significant features and lessons for policymakers", *Tax Notes International*, July 31, 2006, pp. 395~410.
- Ohlsson, Henry, "The legacy of the Swedish gift and inheritance tax: 1884-2004", Working Paper 2007-23, Uppsala University, 2007.
- Poterba, J. "Public finance and public choice", *National Tax Journal*, Vol. LI, No. 2, 1998, pp. 391~396.

<부표 1> 상속 및 증여세수 규모의 변화: 첫해 기준연도 대비

연도	취득형 상속세수 (inheritance tax)	유산형 상속세수 (estate tax)	증여세수
1938/39	100		100
1939/40	85		68
1940/41	77		81
1941/42	81		84
1942/43	65		87
1943/44	84		103
1944/45	74		202
1945/46	84		658
1946/47	93		1033
1947/48	79	100	1718
1948/49	133	5568	318
1949/50	184	12736	100
1950/51	156	9752	128
1951/52	166	9668	111
1952/53	157	8712	108
1953/54	192	9832	92
1954/55	189	9356	100
1955/56	218	11876	107
1956/57	238	12160	99
1957/58	230	10820	137
1958/59	276	12204	145
1959/60	268	3716	238
1960/61	343		311
1961/62	319		283
1962/63	355		361
1963/64	408		401
1964/65	377		522
1965/66	446		470
1966/67	504		638
1967/68	549		590
1968/69	551		1196
1969/70	551		1786
1970/71	553		1698
1971/72	669		1160
1972/73	695		1088
1973/74	747		1048

연도	취득형 상속세수 (inheritance tax)	유산형 상속세수 (estate tax)	증여세수
1974/75	798		1236
1975/76	892		1855
1976/77	1057		2083
1977/78	1084		1818
1978/79	1151		1814
1979/80	1279		1927
1980/81	1339		2063
1981/82	1564		3710
1982/83	1605		5401
1983/84	2171		6135
1984/85	2557		7938
1985/86	2705		7921
1986/87	2859		5029
1987/88	2608		7222
1988/89	2435		10347
1989/90	3133		10918
1990/91	3268		15779
1991/92	3235		10537
1992/93	2305		6326
1993/94	2543		4170
1994/95	3037		6137
1995	3111		12163
1996	3340		7948
1997	4510		8912
1998	5032		10035
1999	5384		10910
2000	5987		18465
2001	6305		15133
2002	7579		13332
2003	6237		12631
2004	5946		19175
2005	2493		8932
2006	316		378

주: 1994년 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1995년부터는 달력 기준연도임.

<부표 2> 스웨덴의 경제성장 추이

연도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	기준연도 대비 GDP 규모 (2000년 = 100.0)
1950		24.8
1951	2.8	25.5
1952	1.6	25.9
1953	3.5	26.8
1954	5.7	28.4
1955	3.0	29.2
1956	3.3	30.2
1957	2.4	30.9
1958	2.4	31.6
1959	5.4	33.3
1960	3.7	34.6
1961	5.7	36.5
1962	4.3	38.1
1963	5.3	40.1
1964	6.8	42.8
1965	3.8	44.5
1966	2.1	45.4
1967	3.4	46.9
1968	3.6	48.7
1969	5.0	51.1
1970	6.5	54.4
1971	0.9	54.9
1972	2.3	56.2
1973	4.0	58.4
1974	3.2	60.3
1975	2.6	61.8
1976	1.1	62.5
1977	-1.6	61.5
1978	1.8	62.5
1979	3.8	64.9
1980	1.7	66.0
1981	-0.2	65.9
1982	1.2	66.7
1983	1.8	67.9
1984	4.3	70.8
1985	2.2	72.3
1986	2.9	74.4



연도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	기준연도 대비 GDP 규모 (2000년 = 100.0)
1987	3.5	77.0
1988	2.7	79.0
1989	2.8	81.2
1990	1.0	82.1
1991	-1.1	81.1
1992	-1.2	80.2
1993	-2.1	78.5
1994	3.9	81.6
1995	4.0	84.9
1996	1.5	86.1
1997	2.5	88.2
1998	3.8	91.6
1999	4.6	95.8
2000	4.4	100
2001	1.1	101.1
2002	2.4	103.5
2003	1.9	105.5
2004	4.1	109.8
2005	3.3	113.4
2006	4.1	118.1
2007	2.7	121.3